'투약권' 명시·표준진료지침 해석 시각차

■ 의료법 개정안 주요쟁점 뭔가

'유사의료 행위' 조항도 논란

보건복지부가 5일 34년 만에 전면개정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 제출을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제2의 의료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복지부의 개정안은 병원급,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사가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질병의 내용과 치료 방법을 설명토록 의무화했다.

또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의료기관 명칭에 클리닉(Clinic), 메디컬 센터(Medical center) 등 외국어 명칭도 병행해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의료행위의 정의 규정, 일부 유사의료행위 인정 근거규정 마련, 표준진료지침 제정 근거 신설, 종합병원 인정기준 및 의료인 보수교육 강화, 의료인 중앙회에 징계요구권 부여 등을 담고 있다.

■ 의료법 개정안 주요쟁점

	개정안의 주요내용	의사협회 주장
의료법	- 목적조항을 명확화	
설명의무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명의무 신설 -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질병 및 그 치료방법 등을 설해야한다"	- 설명의무를 위반 시 형사 처벌될 수 있음 -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별도로 의료법책임을 지므로 별도로 의료법에 명시 불필요
의료행위	- 의료행위 개념 신설 -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	- 의료행위에 '투약' 명시 요구
표준진료 지침 제정	- 표준진료지침 제정 근거 마련	- 의료는 규격화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규정자체를 반대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처벌	- 허위진료기록부 작성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 별도의 처벌규정 불필요
간호사의 업무	-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화 - 요양상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에 관한 규정을 구분하여 규정	-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진단'을 포함할 경우 의사들의 업무범위를 침해

▲개정안 쟁점=이번 개정안의 제4조 '의료행위' 규정에 '투약(投藥)' 문구가 빠지자 의사들은 대법원 판례(2002년)로 인정된 의사의 투약권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항에 명문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통상 행위'란 말 속에 투약이 당연히 포함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의협은 제40조 '간호사 업무'에 '간호진단'이란 용어를 넣은 것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진단'을 간호사들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미국에서도 '간호진단'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또 간호진단은 간호사들의 일상적인 진료보조 행위를 의미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들이 또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제122조 '유사의료 행위' 부분이다. 복지부는 피부미용, 수지침 같은 민간의료행위 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행위를 의료행위로 규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위해가 없을 경우 처벌을 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 이에 대해 의사들은 불법 의료행위를 난립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낙하산 인사 사전 차단

공기업 임원선임에 사원 참여…일간지 통해 공모

공공기관법 시행령

오는 4월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사원들이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에 반드시 참여하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가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지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안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15명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추천위에는 해당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사원 대변자가 없는 임원추천위는 성립되지 않게 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원 중에는 노조원 외에 비노조원도 있으며 노조가 없는 공공기관도 있다"면서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뽑은 뒤 대의원회의에서 구성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물 2명을 선임해 이사회에 추천, 1명이 최종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A공사 사장을 뽑는다면 사원들은 노조원대표 4명, 비노조원대표 1명 등 모두 5명의 대의원을 선임한다. 대의원들은 논의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외부인물 B씨와 C씨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가 회의를 열어 이들 중 B씨를 사장추천위원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시행령은 또 임원후보를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와 1개 이상의 일간지에 2주 이상 공고토록 명시함으로써, 공개모집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했다.

시행령은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인사 자격기준으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판·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상장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임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감사·회계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등으로 정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위는 임원추천위로부터 3배수를 넘겨받아 도덕적 하자가 있는지, 과거 실적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총수입액 1천억원 미만, 직원정원 500명 미만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아닌 주무부처의 장에게 부여했다.

/연합뉴스

남극대륙운석탐험단 귀환 남극에서 운석 5개를 발견한 남극대륙운석탐사단 단원들이 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밝은 표정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유급 인턴보좌관제 철회

관련예산 자진 삭감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난해말 무리수까지 두면서 추진했던 유급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5일 공식 철회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유급 인턴보좌관제 도입 관련 예산(1억7천640여만원)을 전액 삭감해 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1월12일 행정자치부가 대법원에 제기한 '2007년 광주광역시 예산안 수정안 의결 무효확인의 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진선기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유급 보좌관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적 여론 등을 감안했다"며 "시의회가 추진했던 유급 인턴보좌관제를 공식 철회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동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16개 시·도 중 광주시 등 4개 광역시만 제외하고 비즈니스용으로 쓸 수 있는 관사가 건립돼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광주시도 비즈니스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장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지역 현안이 발생했을 때 시민사회단체와 일반시민들이 시장관사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외국투자가들을 일반 식당 또는 호텔에서 접대하는 것보다 시장관사로 초청해 음식을 접대하는 것이 투자로 이어지는데 훨씬 유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현장과 시각

'위에다치처'를 배우자

이종태 경제부 차장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 제조업체들 가운데 50여개 업체가 변화된 중국 경제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했거나 야반도주했다는 씁쓰레한 소식이 들린다.

중국은 한때 값싼 노동력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 때문에 한국기업들로부터 '엘도라도'라고까지 불렸다. 그러나 지금 인건비 상승과 인력부족 현상 등 심각한 '성장통'을 앓으면서 한국기업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최근 '경제 국수주의'를 외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행태도 심상치 않다. 외국기업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세제나 노무정책을 급전환하고 법률을 엄격히 적용, 정보력이 부족한 한국기업들을 내몰고 있다. 중국의 현실을 고려해 단단히 무장하지 않은 한국기업들에게 중국은 더 이상 '엘도라도'가 아니다.

이같은 어려움을 뚫고 '천리마' 신화를 일궈낸 기아차의 중국 도전일기는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에게 적지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기아차는 지난 2000년 중국정부·기업과 합작투자해 장쑤성 옌청시에 둥펑 위에다치처 유한공사를 설립했다. 중국 내에서조차 지명도가 떨어지는 옌청시를 후보지로 선택한 것은 기아차의 절묘한 노림수였던 것으로 회자된다.

변변한 공장 하나없는 옌청시는 위에다치처 설립과정에 사활을 걸었다. 부지제공에서부터 항만 건설, 상수도 등 기반시설 구축 등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기아차 관계자들의 입을 쩍 벌리게 했다.

고교졸업 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했던 풍부한 인력을 싼 값에 고용할 수 있었던 것도 양측의 잇속이 맞떨어졌기에 가능했다. 대신 옌청시는 위에다치처로부터 전체 세수의 75%를 거두는 성과를 거뒀다.

그로부터 4년. '천리마(액센트를 수출용으로 개조한 승용차)' 신화가 탄생했다. 2004년 5만5천대를 팔아 중국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등장한 것이다.

오는 10월 2공장 준공을 계기로 연간 43만대의 승용차를 생산해 5위권에 진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위에다치처는 빡빡해진 중국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R&D)을 통해 RV(레저용 차량)시장 진출을 노크하는가 하면, 181개 대리점 직원 교육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조만간 모든 외국인 회사에 결성될 공회(노동조합)에 대비, 상당액을 직원들의 복지비로 책정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을 갖는 등 중국 연착륙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진출을 꿈꾸는 한국기업들이라면 몇번이고 곱씹어봐야 할 사례가 아닌가 한다.

/jtlee@kwangju.co.kr